

데스크시각

박 치 경



모처럼 민주당에 화색이 돌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비록 다음날 곧바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개정 미디어법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려 겉으로는 불만 표정이지만 재보선 승리로 민주당은 활기차 보인다.

‘스스로’ 표 얻어야 비전

여기에도 때마침 터진 여권 내 ‘세종시 내분’도 민주당으로서도 호재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수정론과 원안추진 카드로 차기 대권후보 기 싸움을 벌이는 사이 민주당은 충청민심을 어루만지며 연일 공세다.

재보선 승리와 여권의 난맥상을 비집고 승기를 잡으며 작심했을까? 내진감에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고삐

를 바짝 죄고 나왔다.

민주당으로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징검다리인 내년 지방선거가 사실상 당의 명운을 결정할 전환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방선거마다 반복되

민주당, 지방선거 이기려면

는 여권에 대한 견제심리에 따라 거저 승리자가 돼서는 곤란하다. 민주당 자체 추동력에 의해 민심을 얻어내야만 대선 승리를 바라볼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1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대대적인 ‘변화’를 선언했다. 정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회에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 승리를 위해 민주당과 정세균이 과감하게 변화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정책과 아권통합 전략, 리더십 등에서의 대담한 변화를 약속했다.

때맞춰 민주당 내 지방선거기획단은 위무인사 영입을 1차 활동목표로 정하고 공개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호남을 중심으로 참신한 인재 영입에 나서고 내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 방법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지방선거가 시작된 셈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략을 내비치자 광주·전남지역 입지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직도 지역정치 지형상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을 부인하기 어려운

비중이 커지고 있는 민주당 후보의 조건을 뜯어보자. 우선 단체장 후보로는 지역 앞날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 나아가 지역주민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무한책임’을 저야 한다는 주문이다.

안방 좋은 후보 승리 관건

지방의원 역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후보라야 한다. 고위 당직자, 지역 국회의원의 앞에서는 굵실굵실하다가 선거구민 앞에서는 거들먹거리는 부류는 최악이다. 적어도 지역과 관련된 조례안 정도는 누구의 도움없이 반듯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은 기본이고, 유권자의 하소연을 가슴으로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후보를 잘 뽑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민주당의 프랜차이즈인 광주·전남에서 제대로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를 받아야 호남선을 타고 수도권으로 번지는 바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지금부터 광주·전남 후보선택을 고민하라.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박 행 순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1위가 여자는 자살, 남자는 운수사고이며 20대에서는 남녀 모두 자살이 1위로서 운수사고의 두 배에 달한다. 얼마 전 신문에는 “광주 초·중학생 10명 중 3명 자살 고민”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치의 두 배로써 단연 1위이다. 2007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만 명당 24.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34명에 해당한다. 자살자가 약 20

인을 들 수 있다. 사회환경적 요인으로서는 가정문제,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풍토, 유명인 자살에 자극받은 베르테르 효과에 따른 모방,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 등을 들 수 있다. 게임 주인공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에 익숙해져서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터넷 세대는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믿을만한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8.3%, 청소년 27.7%가 자살을 인간의 권리로 생각한다는 사실

‘청소년 자살’ 그 해법은

번의 시도를 하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매일 700번 가까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자살논의는 더 이상 금기사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논의가 오히려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을 연구하고 예방하듯 자살도 그 실체를 알리고 다양한 예방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자살자가 실제로는 죽고자 하는 마음과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10명 중 8명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거나, 아까는 물건들을 나누어 줄 때, “사랑한다. 미안하다. 용서하라. 나를 기억해 달라. 그간 미안했다” 등의 말을 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주위에서 자신의 자살의도를 읽고 도와주기를 바라며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복수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수단, 성적하락으로 인한 자책 등의 개인 심리적 요인과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적 요

인이다. 자살과 타살은 똑같은 살인(殺人)이며 개인의 선택이나 권리로 인정될 수 없는 범죄이고, 반인륜적 행위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또한, 자살이후가 현재보다 행복하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학교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총론적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생명의 전화’에서는 전화상담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시한부환자들의 생명연장을 위한 투병 과정을 통하여 생에 대한 애착과 생명의 고귀함을 청소년들이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것도 좋은 접근방법이다. 필자는 생화학을 강의하면서 생명현상의 오묘함에 절로 경이감이 우러나 생명의 고귀함과 우리 존재의 위대함을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자살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사)국제과학문화 협회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심각한 교통난 해소 ‘양보 운전’이 최선

얼마 전 교통 경찰관 친구에게 심각한 교통난에 대한 획기적 대책은 없는지 물었더니 첫마디가 “양보운전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딱 잘라 말했다. 웬 입 발린 소리인가 했더니 친구는 양보운전이 왜 교통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신호체계를 단순화해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를 없애고 직진과 정지신호만으로 운영하면 4단계 신호가 2단계로 간소화되고 소동 시간이 2배로 빠르게 되는 것이다. 이때 좌회전

차량은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한다. 일본의 경우 직진신호에 좌, 우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게 해서 차량정체가 많이 해소되었다는데, 문제는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려면 직진차량의 양보가 필수인데 앞만 보고 땀 뻘뻘 달리는데 우회로 교통문화에서 현재 도입을 염두에 못 내는 것뿐이라 한다. 모든 운전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여 교통이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남상민·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기 고

장 인 식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기초·광역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명실공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졌으며, 자치행정정실수요자인 지역주민과 행정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 편에서는 2할 자치나 3할 자치나 하는 표현으로 지방자치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는 사무·기능·재정분권을 3

지방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대 축으로 한다. 이 3가지 축이 맞물리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지방의 역량이 강화되며 선진화된 지방자치가 정착돼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3가지 분권이 여전히 미흡해 중앙권한의 과도한 우위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자치권 행사에는 미흡한 불안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통계가 말해주듯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즉 재정지출 비율을 보면, 중앙대 지방이 40 대 60으로 지방의 비율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9.2 대 20.8로 오히려 국세의 비중이 높은 불균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49.6%인 114개 단체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곤란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취약하고, 특히 호남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심각하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15.3%), 전남(11%)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전남 고흥(7.6%), 완도(6.4%), 신안(6.4%)의 3개 군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지방의 재정여건을 정확

히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방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에 필자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세 비율 30%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걸맞은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현행 보통교부세율을 보다 인상하고,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비율을 상향조정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보다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단행할 필요가 있다. 또 국고보조사업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거나 지방의 부담을 현행보다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지방 스스로도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해야 한다. 즉 재정의 계획,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약, 집행 및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예산절감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산절감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향토자원 및 관광자원 개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예컨대 ‘보성 녹차’, ‘고창 복분자’, 그리고 필자의 고향인 고흥의 경우에도 ‘유자’, ‘석류’, ‘고막’ 등은 무공해 농산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책당국은 이런 소중한 향토자원을 발굴·육성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예산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감사>

거짓 사골 설령량 ‘충격’ 뭘 먹으라는 것인지...

얼마 전 TV프로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표적인 보양식인 설령탕을 만드는 과정을 고발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솔직히 밖에서 사먹는 설령탕은 솔직히 그 품질을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 설령탕집 간판에는 원조, 100% 사골로 끓여 우려낸 설령탕, 한우 육수 사골 국물 등등 그 표현도 화려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다.

TV프로에서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설령탕집 등 여기저기 음식점의 설령탕 육수를 구입해 커피 크림에 들어 있는 식물성 지방산과 부유에 들어있는 유지방을 추출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의 설령탕에서 소뼈나 소고기에서는 나오지 않는 식물성 지방산이 나왔고 한 지점에서는 다른 설령탕보다 10배가 넘는 식물성 지방산이 검출되었다. 한식 전문가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100% 사골로 끓인 설령탕에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었다.

유명한 설령탕 전문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곳마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 믿고 먹어야 할까. 이렇다거 손님들이 외식을 아예 끊어버려 시내의 모든 식당들이 문을 닫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민경화·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시 설

‘심각’ 신종플루 강력한 비상조치 강구해야

정부가 어제 국가 전염병 재난 단계를 현행 ‘경계’(Orange)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Red)’단계로 격상했다. 또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설치돼 오늘부터 상시 가동한다. 심각 단계가 선포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상시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전염병 재난 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상향 된것은 신종플루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겁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루에만 1만여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병원의 진료 능력이 한계에 달하는 등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다. 학생들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접종 개시일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으나 보건당국이 의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예를

먹고 있다. 학교마다 수업일수 부족을 염려해 휴업 결정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 학원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노약자나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둔 가정은 불안함을 넘어 공포 수준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건장한 국민들도 ‘결리면 죽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휴교령을 포함한 모든 동원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법정 수업일수만을 고집해 신속한 대응에 실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신종플루 파장은 이제 산업계로 번지고 있다. 여행·관광업계를 비롯한 서비스 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경우 또 다시 경기침체의 깊은 터널로 빠질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신속한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다.

광주 ‘문화특구’ 사업 정부가 나서라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2대 축으로 꼽히는 투자진흥지구(문화특구)조성사업이 사업비 분담을 둘러싼 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광주시 간의 갈등으로 장기표류하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논란으로 문화전당 건립이 차질을 빚는데 이어 문화특구 조성마저 갈팡질팡하고 있어 문화수도 사업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금남로 1가 전일빌딩 일대 1만5천여㎡에 조성되는 문화특구는 특급호텔과 문화산업 벤처타운, 창업보육센터 등 문화 관련기업을 유치해 문화전당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화특구는 문화전당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따라서 문화특구 조성이 무산되면 문화전당은 물론 문화수도 사업 전반이 사실상 ‘절름발이’로 전락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특구 사업은 부지 매입비의 분담을 둘러싸고 10개월 이상 표

류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국고 30억원을 지원하면서 나머지 예산 30억원도 광주시 예산으로 확보토록 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 때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 성격상 추진단이 사업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확보된 국고 30억원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문화특구 사업은 정부가 책임지고 맡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이 사업은 부지 매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자유치로 이뤄진다.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민자유치가 훨씬 용이할 뿐더러 재정 현상도 광주시의 문화특구 사업 참여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문화수도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인 만큼 그 부대사업이라 할 수 있는 문화특구도 정부가 나서서 게 함답하다. 광주시도 재정문제만 들먹이며 ‘내 물라’라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독도나, 마라도처럼 인구에 회자된 것은 아니지만 신안군 가거도가 요즘 꽤나 유명세를 타고 있다. 공중과 방송들이 잇따라 기획취재를 만들고, 올해에는 모 방송국의 예능프로그램이 가거도를 다녀오면서 대표적 인 남도 여행지 리스트에도 올랐다고 한다. 낚시꾼 외에 인적이 드물던 외딴섬에, 여행객들이 늘었다는 것만으로도 적잖이 반갑다.

흑산도에 딸린 가거도는, 가가(佳可·可佳·佳家·佳嘉·可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다. 이 같은 이름들이 목포에서 200여km 떨어진 고도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역설적인 표현에서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

흑산도에 아름다운 산수만큼이나 많은 예깃 거리를 간직하고 있다.

오래전에 발견된 신석기시대의 토기와 돌도끼, 패총 등은 섬 역사의 두께를 짐작케 한다. 또 지방기념물 제 130호인 패총, 지방무형문화재 제 22호인 말치잡이 노래, 천연기념물 제 341호인 구굴도 해조류 번식지 등도 최서남단 국도

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산거리다.

신안군 최고봉을 자랑하는 해발 639m의 독실산에서 나는 후박나무가 전국 약재 후박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는 것도 놀랄 만하다. 그뿐만이. 겨울철 중국어선들의 대피항으로, 행락객들의 사계절 낚시터로, 섬은 간단치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가거도가 휴양·체험·레포츠 활동이 가능한 새로운 복합관광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물과 더욱 가까워질 것 같다. 최근 섬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면서 전남도가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휴양과 레포츠 기능을 갖춘 복합섬은 아름다운 산수만큼이나 많은 예깃 거리를 간직하고 있다.

오래전에 발견된 신석기시대의 토기와 돌도끼, 패총 등은 섬 역사의 두께를 짐작케 한다. 또 지방기념물 제 130호인 패총, 지방무형문화재 제 22호인 말치잡이 노래, 천연기념물 제 341호인 구굴도 해조류 번식지 등도 최서남단 국도

/이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 F A X 227-0118>	경 영 지 원 국 2200-511 < F A X 222-8005>	문 화 홍 보 국 2200-541 <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61
정 치 부 2200-634	어른매체부 2200-679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41	제 육 팀 2200-663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 F A X 02-773-9335>
<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